

# 독도 문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박건우

**연구배경:**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화해의 반복을 보이며, 글로벌 상황과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를 인식하는 시민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독도문제와 한일관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일관계와 관련한 공공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한일관계의 개선방안을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연구방법:**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도문제, 공공외교와 한일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와 인터뷰를 수행하여,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일본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이 독도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공공외교적 접근 방법이 주요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독도문제와 한일관계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독도문제, 한일관계, 공공외교, 일본, 한일갈등

# 1장. 들어가며

## 1.1 연구의 배경

독도(獨島)는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약 87.4km 떨어진 작은 섬이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됐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한반도의 정치, 경제 및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중심에 있어, 두 나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도 문제는 두 나라 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 해양 자원 및 지역 안보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challenge)로 부각되고 있다.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으로 시작된 분쟁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며,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가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왔다. 2000년대 초,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였으며,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8년 2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2008년 7월에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고, 2012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수행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이슈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본의 국립 전시관에서는 독도에 대한 홍보 비디오를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했는데, 영상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북방영토(쿠릴열도 남쪽 4개 섬을 지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일본인임에도 방문할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영토 및 주권 전시관을 방문한 후 아들에게 “일본인이 열심히 일궈온 땅에 지금은 방문할 수 없지만, 너희 세대에는 반드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전시관의 한글 홈페이지에서 “북방영토·다케시마·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표현이 있어 논쟁이 있었다.<sup>1)</sup>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오도하고 왜곡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무교육이 아닌 권장교육으로 독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실제 독도 교육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독도 교육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되기도 했다. 민간에서 외교 역할을 수행하는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VANK)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 사회 기여 단체로, 독도 관련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도와 동해 표기 정정을 위한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해외에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애플(Apple)은 반크의 요청에 따라 독도 표기 문제를 시정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항의와 시정요청을 제출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1) 파이낸셜뉴스(2023.04.12.) “日 국립전시관 “독도는 일본땅, 미래엔 꼭 갈 수 있을 것”, (<https://www.fnnews.com/news/202304122119521321>)

2) 뉴시스(2023.05.10.)서경덕 “일본 국립전시관 독도 퍼즐, 어린이 세뇌 작업”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0\\_0002297138&clID=10701&pl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0_0002297138&clID=10701&plD=10700))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더해, 최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sup>3)</sup>와 관련한 학술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국제정치적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술적 연구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이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의 체계적 접근 및 개념화가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공공외교가 주목하는 대상은 특정 학문 또는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를테면, 문화외교, 보건외교, 디지털 외교 등과 국가 간 관계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 그리고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등 오늘날 글로벌 국제관계와 관련한 현상에 다양하게 주목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독도문제를 포함해서, 한일관계는 오랫동안 ‘단단히 꼬인 매듭’과 같이 풀기 어려운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공외교적 접근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갈등과 화해의 반복과 같은 부침이 지속해서 나타나는데,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한일 양국의 인식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공공외교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의 국민이 상호 호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반일감정이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즉 이미 주어진(given) 것이거나 내재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의 반일감정(anti-Japanese sentiment)은 한국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반일감정은 400여 년 전 임진왜란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으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반일감정은 일종의 상수(constant)인 것이다.” (최종호 외, 2014: 42)

실제로, 한일관계의 개선에 문제가 되는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최근의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sup>4)</sup>부터, 위안부, 독도와 같은 역사 및 영토 문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양국 시민에게 물었을 때, 양국 시민 모두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시민과 우리나라 시민 간에는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따라서, 한일 갈등

3) Nye(2004)의 저서에서는 9.11사태에 따라서 미국의 외교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했으며, 기존의 하드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기초한 공공외교의 재등장으로 전통적 외교 활동에서 확장된 형태의 활동이 증가가 나타난다.

4) BBC News Korea(<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v2zn9enqlo>) 일본은 2023년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이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축적된 오염수는 약 134만 톤에 이른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될 예정이다.

5) 이를테면, 이를테면, 한일 간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한국 시민의 비율이 일본 시민보다 높았다. 특히,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한국 시민은 90%를 상회하는 등 매우

의 완화와 관계 개선은 관련 사항이나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김위근, 2020).

이처럼, 한일관계의 개선은 양국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수 있는데, 공공외교도 그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공외교 수행의 주체로서 일본에 주목하고 있으며(정기웅, 윤석상, 2009; 박창건, 2017; 박명희, 2022),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인식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관련한 역사문제를 일본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고 확대하기 위한 대미 공공외교가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주장도 있었다(박명희, 2022).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 등은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갈등인데, 이러한 문제를 대미 공공외교에 포함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국민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이 효과성을 가지는지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2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1951년 10월 '제1차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을 개최하여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시도했으나, 당시에 한국 대표인 양유찬과 일본 대표인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는 상호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국이 근본적으로 과거와 역사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사 인식과 더불어,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일본은 국제법상 식민지배와 더불어 합법적으로 조선을 지배했으며, 독도에 관한 영유권도 1905년 문제없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문제에 관한 인식은 오늘까지도 한일관계의 경색과 갈등을 지속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회담에서도 보여주듯이, 처음부터 마찰과 대립 등 갈등이 지속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로,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중요한 계기 또는 사례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난항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논리적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하게 인식될 문제는 독도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다. 일련의 조사에 따르면, 한·일 갈등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독도 등 영토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은 89.9%가 독도문제가 한일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본인은 6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독도 등 영토 문제, 위안부 등 역사 문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관련해 독도와 관련한 문제가 91.0% 수준으로 가장 해결되지 못한 이슈라고 응답하고 있다(김위근, 2020). 즉,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한·일간 독도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지만, 일본은 1905년 독도편입 등을

---

높았지만, 일본은 76.8%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문제의 양상과 현황을 관심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도에 관한 관심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애국심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의 구축에도 중요하다. 즉, 독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일본의 주장으로 한일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독도 등 국가 영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정부는 보다 목소리를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시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독도 인식 및 관심의 활성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국가 영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할 경우, 주권침해 위기 등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일 수 있으며, 한일 갈등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1.3 연구의 목적

이러한 상기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독도와 독도문제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 질적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문제1: 독도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공공외교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독도문제 인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즉, 본 연구는 독도 문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도 문제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둘째,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독도 문제의 의미와 해결방안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독도 문제의 복잡성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독도 문제의 더 나은 이해와 해결을 위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 1.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연구의 목적인 개인 수준에서 독도문제에 관해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고, 독도 문제 관한 범국민적 차원의 관심 확대와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며, 연구의 범위는 독도 문제 및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역사학적·사회과학적 연구결과와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활용하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등도 분석에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

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 그리고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셋째,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2장. 독도 이슈의 이론적 논의

### 2.1 독도관련 주요 개념 및 논의

#### 2.1.1 독도의 일반적 현황<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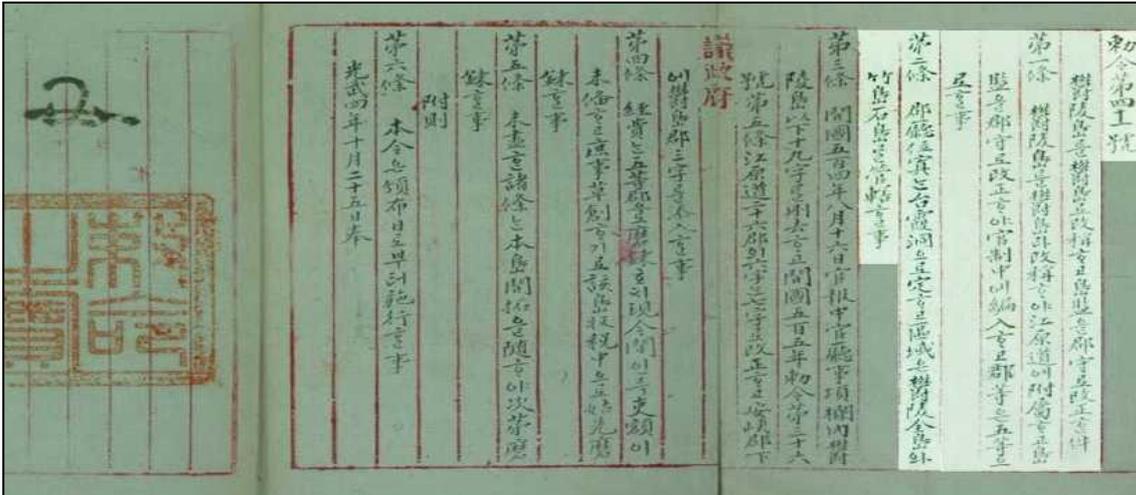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며,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은 동도와 서도를 포함해 총 8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은 187,554m<sup>2</sup>이며, 2023년 8월 기준, 상주 인원은 26명으로 주민 1명, 독도경비대원 20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대관리원 3명 등 거주 중이다. 서도에는 주민숙소, 음용시설이 있고, 동도에는 독도등대, 위성안테나, 경비대가 위치해있다. 역사적으로 신라(新羅)의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편입되면서 독도도 함께 편입되었고, 이후 고려(高麗)와 조선(朝鮮) 시대에도 한국의 영토로 계속 인식되었다. 독도영유권의 근거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에서의 한국 영토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이에 따라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1770년)에서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태정관지령(1877년)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와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지시를 내무성에서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가 87.4km로, 일본의 오키섬과는 157.5km라는 거리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2차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여러 각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sup>7)</sup>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일본은 독도의 소유권에 대해 도발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sup>8)</sup>

6) 외교부(<http://dokdo.mofa.go.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발췌 후 정리

7) 대한민국 정부(2016.10.25.)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23496#go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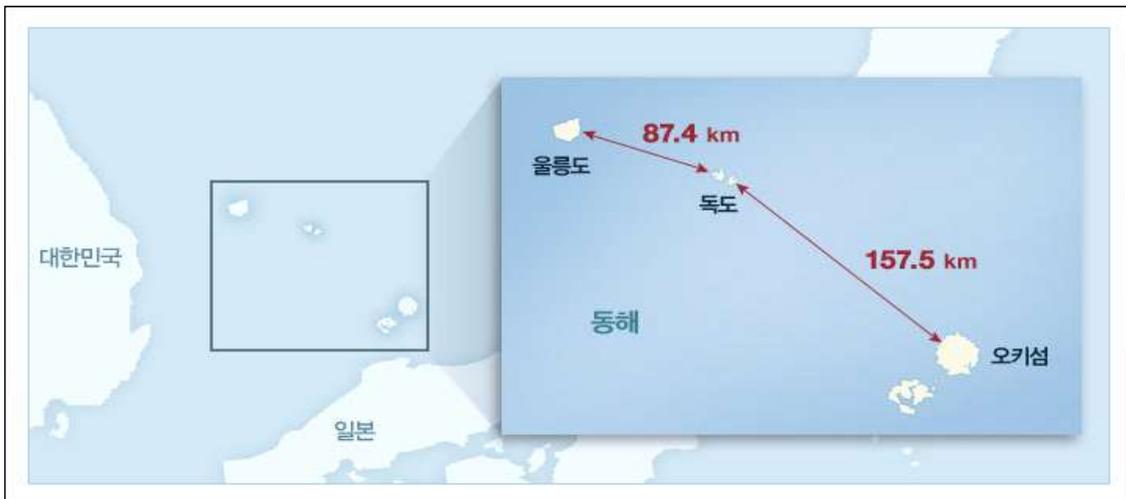
8) 한군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3.06.04),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953>,

<그림 1> 칙령 제41호



출처: 외교부(<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

<그림 2>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출처: 외교부(<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location.jsp>)

독도는 남북에서 만나는 한류와 난류의 중심지로 황금어장, 미생물 보고, 해양심층수를 포함하며, 지하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암이 존재한다. 또한 군사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기상관측과 천문 관측기지로의 가치를 지니며, 육지와는 통신 연계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이는 해양 및 지질 연구의 중요한 자원으로 독도의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sup>9)</sup> 이에 대해서 정부는 독도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였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독도와 주변해역을 보전 및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다양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한다.<sup>10)</sup>

9) 김군수, 한영숙.(2015).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7, 1-26.

## 2.1.2 독도관련 문제

독도와 관련한 이슈와 문제는 군사적 긴장, 역사적 이해의 차이, 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독도 주권 분쟁은 한일 양국 사이의 군사 동원 및 훈련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독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는 지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사 훈련 증가와 군사력 강화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군비 경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역사적 이해의 차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역사적 소유권과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고려 시대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토로 주장한다. 이러한 역사적 이해 차이는 양국 사이의 주권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자원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독도와 인접 해역은 어업과 자원 개발의 중요한 지역으로, 독도 문제는 이러한 자원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발생한 문제이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일본이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가 영토권 주장의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며,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최근에는 외무성 책자 발행과 교과교육 강화로 도발을 이어갔다.<sup>11)</sup> 이 이슈의 중요성은,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간의 복잡한 이슈로, 양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독도 주변 해역의 경비와 독도 명칭 문제에서 나타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해외 지도의 명칭 수정, 독도 홍보, 독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독도 교육 강화가 포함된다. 영토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며, 독도의 영유권 확립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인도 Kurukshetra University의 Madan Mohan Goel 교수는 Korea Times의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2)</sup> 해당 내용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이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식민지 지배의 유산으로 지속적인 역사왜곡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저는 독도 논쟁에 있어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역사학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학자들 중 일부가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

1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http://dokdo.ngii.go.kr>)

11)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369>

12) The Korea Times (2011.07.21)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3/10/137\\_91346.html](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3/10/137_91346.html))

적인 의견으로는 이 논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다고 느껴집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제3자의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독도 분쟁은 한-일 관계의 불안정을 크게 촉진시킨 역사왜곡의 한 사례입니다. 일본의 35년간의 한국 식민지 지배의 유산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5년과 1998년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 환경 조정을 위한 조치였다. 처음 1965년 협정은 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체결되었고, 이후 1998년에는 국제 어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들은 주로 동해와 제주도 남부 수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규정하며, 불법 조업 단속과 어업공동위원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독도 해역을 중간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유발한다. 1998년 협정 체결 후 양국은 2016년까지 매년 조업 협정을 갱신했으나, 현재는 협정이 중단되어 양국 간의 어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독도문제는 교과서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2011년 일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본에 대해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검정 통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더 많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독도문제를 세계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졌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게 되고, 일본은 이를 통해 다른 영역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이 분명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분쟁을 피하고자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경비대만을 배치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04년에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의 어업 활동을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정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근거와 맞지 않는다. 한국의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는 약 6세기 초 신라 시대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국으로 표기하며 신라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세종대왕 시기에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술하고 있다. 1900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독립군을 설치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1945년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시켜 한국에 반환했다. 더불어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가 확실히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었고, 이후 1904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13) 『신(新) 한·일(韓·日) 어업협정(漁業)定과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제성호, 우리영토, 2007)

『한·일(韓·日) 어업협정(漁業)定은 파기(破棄)되어야하나』(최낙정, 세창출판사, 2002)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905>)

것은 역사적 사실과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 2.2 공공외교의 이해

공공외교의 이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외국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의 가치, 정책 및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늘리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외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공공외교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독도를 알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이 독도의 해양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독도 이슈를 중심으로 생태계 보호, 기후 변화, 경제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인식을 높이는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이러한 이슈들과 연관 지어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념을 통해 먼저 공공외교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외교에 대한 제도적 근거인 「공공외교법」 및 동법의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공공외교법」의 제2조(정의) 및 제1조(목적)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하며,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균형 있게 통합하여 추구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외교의 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의 구축 및 실행,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의 책무를 수행한다.<sup>15)</sup>

이론적으로 공공외교는 “국제관계에 있어 전통적 외교를 넘어서는 범위를 포함하는데, 이를테면, 외국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각 국가내의 민간단체와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외교문제의 언론보도와 이것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외교관과 해외주재원 등 커뮤니케이션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각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을 포함한다.” (김명섭, 안혜경, 2007: 302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공공외교가 전통적인 외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명성, 안혜경, 2007).

이러한,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간 외교와는 달리, 문화, 예술, 원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공공외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된다.<sup>16)</sup> 이러한 공공외교

14) 외교부([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1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공외교법」

를 전통적인 외교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통외교에서는 주체가 정부이며, 대상은 상대국 정부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사용되는 자원과 자산은 하드파워(hard power)에 중점을 두고, 매체는 정부간의 공식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20세기의 공공외교에서는 주체는 여전히 정부이지만, 대상에는 상대국 대중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며 자국민은 불포함된다. 자원과 자산은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의 전환을 보이며, 매체는 선전(propaganda)과 PR 캠페인 등이 사용된다. 관계유형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이며, 소통의 양식은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의 신공공외교에서는 주체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로 확장되며, 대상에는 상대국 대중과 자국민이 모두 포함된다. 자원과 자산은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며, 매체는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가 다양하게 활용된다. 관계유형은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소통의 양식은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표 1>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의 요소별 비교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은 불포함)	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 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현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 (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외교부([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또한, 공공외교는 이론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정치체제, 정책과정, 그리고 중개변인 및 환류 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 및 유형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외교가 과연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국의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조기숙, 김화정, 2022). 이러한 접근뿐만 아니라, 공공외교는 자국의 매력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오늘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일련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 외교활동과 수단을 통한 국가 중심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와 현상에 관한 인식은 공공외교가 기존의 전통적 외교에서 확장되어 외교행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수단과 목표 등이 더욱 다양화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이재목, 2021)

## 2.3 문헌검토

16) 외교부(<https://www.mofa.go.kr/>)

먼저, 독도 및 독도 문제 인식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독도의 국제적 인식 개선 필요성과 독도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이재하(2013)는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며, 한국의 독도로 인식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도를 가치 있는 유인도(island)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의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은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영유권 행사와 강화에 직결된 독도개발정책 추진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장근(2014)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인식과 영토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의 독도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독도 이슈에 대해서 정치학적 맥락에서 접근한 Kim(2010)은 자유주의 접근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이 독도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권 및 영토 분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이나 협력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독도는 정체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며, 이를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행동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미 2010년에,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일본 에도 및 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 인식,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등이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제시되어 있었다.<sup>17)</sup>

공공외교와 관련한 정책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정책검토를 통한 대안과 방향성 제시, 한류를 활용한 정책대안, 지자체의 공공외교 등에 주목하고 있다(김태환, 2021; 고정민, 2022; 나용우, 2022).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역할과 방향성을 살펴본 김태환(2021)의 연구에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공공외교가 노무현정부 이후부터 발전해온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관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범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내적 합의가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한류에 대해 고찰한 고정민(2022)의 연구에서는 한류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기업 경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글로벌 대중문화의 사례로서 일류, 발리우드, 할리우드, 텔레노벨라, 그리고 흥류(홍콩)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업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류활용을 통한 공공외교 정책을 비판적이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한류관련 ODA와 현지 네트워크 확대, 민간역할의 증대 등의 전략 및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나용우(2022)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외교 모델을 사례로 들면서, 지자체 공공외교로서의 평화공공외교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TS와 같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김수진, 이해은(2023)의 연구에서는 K-POP의 글로벌 확산이 한국의 국가 이미

17) 대한민국 정부(2010.01.06.) “대한민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국·영문)”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342#:~:text=%EC%A0%95%EC%B1%85%EB%B8%8C%EB%A6%AC%ED%95%91>

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미국 내 BTS 팬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분석결과에서는 BTS 팬의 소셜미디어 활동 자체는 한국의 국가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BTS와의 준사회적 관계가 국가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문화와 관련한 공공외교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논의된 것을 알 수 있다(이원덕, 2014; 전재은, 강규원, 2017; 최은미, 2018; 최종호 외, 2014; 이문영, 2023; 이숙종, 2017; 서정욱, 김동욱, 2020; 기미야 다다시, 2018). 먼저, 이원덕(2014)의 연구에서는 한일관계와 역사적 갈등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김영삼정부의 대일 역사외교를 분석하며, 대통령이 리더십이 한일관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은미(2018)의 연구는 한일 갈등사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국가정체성이 다르게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갈등 사안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은 높으나 신뢰감은 낮았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민감한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재은, 강규원(2017)의 연구는 일본에서 국비 장학금을 받아 유학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본유학이라는 실질적 경험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인과의 교류와 유학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유학 경험 등이 현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호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일감정을 단순히 주어진 현상으로 보지 않고,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 경험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대일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와 한일 FTA 등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한 반대가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으나, 일본 방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최종호 외, 2014).

그리고 이문영(2023)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와 일치하며, 기성세대와의 차이는 미미하다. 특히, 20대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대와 30대 모두 역사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숙종(2017)의 앞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연구원-겐론(言論)NPO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은 대통령과 행정부, NGO에 대해 일본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였지만, 일본은 법원, 정당, 의회 등에 대해 한국보다 더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정욱, 김동욱(2020)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일 문제에 대한 남북공동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참여 의향, 인식 수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남북 공동 대응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위근(2020)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을 대상으로 양국의 갈등 현황과 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인식은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후 제품 구매와 콘텐츠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 그리고 상호간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하며, 양국 시민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상대 국가의 정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분석한 기미야 다다시(2018)의 연구는 탈냉전 이후 한중일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 한반도와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대한 및 대중 정책에 대한 여론과 정책의 괴리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한일 간에는 미중 관계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한일 간의 인식의 괴리가 극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한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일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실증적 분석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공외교적 관점을 활용한 독도문제의 개선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이 독도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공공외교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다음에 관련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지속해서 논의됐으며, 주로 다양한 문헌자료와 사료에 근거하여 한국 또는 일본의 인식을 살펴보거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우리의 대응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기존의 독도문제의 담론은 역사적 또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국제법적 범위 안에서 일본의 주장에 관한 제도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독도문제의 당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문제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 기존의 연구는 그 담론을 형성하고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접근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3장. 분석 및 주요 결과

####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실증분석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독도문제의 인식과 심각성을 분석한다. 독도 문제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특성(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은 이를 인지하는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요인들이 독도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 자료는 2020년 8월 수행되었으며, 20세 이상부터 69세까지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과 일본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호감도, 일본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이미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의 해결 정도, 한·일 양국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변화 예상 정도, 한·일 관계 관련 의견 동의 정도 그리고 뉴스 및 언론 등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별로 분류하여 모집되었다. 최초, 이메일 발송을 통해 9,584건과 조사 접속자 2,055명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최종 응답률은 10.4% 수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보면, 남성은 51.1%, 여성은 48.9%이며, 연령 분포는 20대가 18.3%, 30대가 18.7%, 40대가 22.2%, 50대가 23.4%, 그리고 60대가 17.4%였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19.1%, 대학(재학 및 졸업)이 72.3%,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8.6%였다(표 2 참조).

<표 2>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중(%)	누적 비중(%)
성별	남성	489	48.90	48.90
	여성	511	51.10	100.00
연령	20대	183	18.30	18.30
	30대	187	18.70	37.00
	40대	222	22.20	59.20
	50대	234	23.40	82.60
	60대	174	17.40	100.00
학력	고졸 이하	191	19.10	19.10
	대학 재학	80	8.00	27.10
	대학 졸업	643	64.30	91.40
	대학원 이상	86	8.60	100.00

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정도는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독도 등 영토 문제 문항에 대한 것으로, ①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② 해결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해결된 편이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독도문제가 한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한영향을 미친다 등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와 독도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주제를 학습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도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와 분석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개방 형태로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지하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 3.2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63.2%)가 문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평균 점수는 4.48 수준이었으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 남성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65.2%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평균 점수는 4.54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50대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점수도 4.5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60대는 57.5% 수준으로, 평균 점수는 4.32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67.4% 수준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4.62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70.1%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는 4.58로 가장 높았다. 즉, 이는 독도문제가 한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독도문제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매우 심각한영향을 미친다
전체		1.5	1.8	6.8	26.7	63.2
성별	남성	2.2	2.2	7.8	26.6	61.3
	여성	.8	1.4	5.7	26.8	65.2
연령	20대	.5	1.6	7.7	34.4	55.7
	30대	2.7	1.6	5.9	21.4	68.4
	40대	.9	.9	7.2	27.0	64.0
	50대	1.3	.9	4.3	25.2	68.4
	60대	2.3	4.6	9.8	25.9	57.5
학력	고졸 이하	1.6	3.7	12.0	20.4	62.3
	대학 재학 및 졸업	1.5	1.5	5.9	28.1	62.9
	대학원 이상	1.2	0.0	2.3	29.1	67.4
정치성향	보수 성향	2.2	1.7	6.2	28.7	61.2
	중도	1.3	1.5	9.2	27.7	60.3
	진보 성향	1.4	2.5	2.5	23.5	70.1

주: 한일갈등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0)의 내용을 재구성

전체 응답자 중 67.3%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평균 점수는 1.44로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간 높은 68.5%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평균 점수는 남성보다 약간 낮은 1.40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응답이 73.9%로 가장 높고, 평균 점수는 1.35로 가장 낮았으며, 반면 20대의 응답은 56.8%로 가장 낮고, 평균 점수는 1.56으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자와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평균 점수는 동일한 1.42였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응답이 79.0%로 가장 높고, 평균 점수는 1.29로 가장 낮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 인식 수준

(단위: %)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해결된 편이다	완전히 해결됐다
전체		67.3	24.5	5.5	2.2	.5
성 별	남성	66.1	24.3	6.1	2.5	1.0
	여성	68.5	24.7	4.9	1.8	0.0
연 령	20대	56.8	32.2	8.7	2.2	0.0
	30대	65.2	24.1	7.0	2.7	1.1
	40대	71.6	20.7	5.4	1.4	.9
	50대	73.9	19.7	3.8	2.6	0.0
	60대	66.1	28.2	2.9	2.3	.6
학 력	고졸 이하	60.7	30.4	5.2	3.1	.5
	대학 재학 및 졸업	68.7	23.2	5.5	2.1	.4
	대학원 이상	69.8	22.1	5.8	1.2	1.2
정 치 성 향	보수 성향	63.5	23.6	6.7	5.6	.6
	중도	62.5	29.2	6.5	1.7	.2
	진보 성향	79.0	16.0	2.8	1.1	1.1

주: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0)의 내용을 재구성

2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51, 남성의 평균 점수는 1.61로 남성이 더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0.75 수준이었다. 3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38, 남성의 평균 점수는 1.62로 남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68, 남성의 표준편차는 0.93 수준이다. 4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34, 남성의 평균 점수는 1.44로 남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61, 남성의 표준편차는 0.83이다. 5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42, 남성의 평균 점수는 1.28로 여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4, 남성의 표준편차는 0.61이다. 6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36, 남성의 평균 점수는 1.5로 남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55, 남성의 표준편차는 0.85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1.4, 남성의 평균 점수는 1.48로 남성이 더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67~0.80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표 5>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 인식 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여성	AVG	1.50	1.37	1.34	1.42	1.36	1.40
	SD	.745	.680	.613	.73	.550	.67
	Freq	87	90	108	116	88	489
남성	AVG	1.61	1.61	1.43	1.27	1.5	1.47
	SD	.745	.929	.831	.611	.850	.801
	Freq	96	97	114	118	86	511
전체	AVG	1.56	1.50	1.39	1.35	1.43	1.441
	SD	.745	.825	.733	.678	.715	.740
	Freq	183	187	222	234	174	1000

주: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2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41,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5로 남성이 약간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7, 남성의 표준편차는 0.74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6,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3으로 여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6, 남성의 표준편차는 0.99이다. 4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6,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8로 여성이 더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0.75이다. 5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9, 남성의 평균 점수는 4.58으로 거의 유사하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1, 남성의 표준편차는 0.76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1, 남성의 평균 점수는 4.12로 여성이 더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1, 남성의 표준편차는 1.17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4,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3으로 여성이 더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74~0.89의 범위를 보인다.

<표 6>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독도 등 영토 문제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여성	AVG	4.41	4.6	4.56	4.59	4.51	4.54
	SD	.770	.761	.752	.709	.711	.740
	Freq	87	90	108	116	88	489
남성	AVG	4.447	4.432	4.482	4.57	4.11	4.426
	SD	.7379	.988	.743	.755	1.172	.888
	Freq	96	97	114	118	86	511
전체	AVG	4.43	4.51	4.522	4.58	4.31	4.483
	SD	.751	.888	.747	.731	.984	.821
	Freq	183	187	222	234	174	1000

주: 한일갈등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다음은 성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다. 매우 보수적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 남성의 평균 점수는 4.25로 남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1.15, 남성의 표준편차는 0.86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9,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3으로 여성이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0.85이다. 중도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 남성의 평균 점수는 4.38으로 여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3, 남성의 표준편차는 0.91이다. 진보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64, 남성의 평균 점수는 4.54로 여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68, 남성의 표준편차는 0.85 수준이다. 매우 진보적 성향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점수는 각각 4.5와 4.45로 거의 유사하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0.71, 남성의

표준편차는 1.21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4.54,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3으로 여성이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74~0.89의 범위를 보인다.

<표 7> 성별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독도문제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

		매우 보수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진보	전체
여성	AVG	4	4.58	4.5	4.641	4.5	4.541
	SD	1.15	.848	.731	.676	.707	.740
	Freq	7	56	282	134	10	489
남성	AVG	4.25	4.43	4.37	4.53	4.454	4.426
	SD	.856	.847	.908	.854	1.213	.888
	Freq	16	99	259	126	11	511
전체	AVG	4.17	4.49	4.44	4.592	4.476	4.483
	SD	.936	.847	.822	.768	.980	.8212
	Freq	23	155	541	260	21	1000

주: 한일갈등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성별 및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매우 보수적 성향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1.43,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2.13으로 남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79,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1.09 수준이다. 보수적 성향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1.46,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1.54로 남성이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87이다. 중도적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1.45,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1.51으로 남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66,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0.76이다. 진보 성향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1.27,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1.29로 거의 비슷하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59,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0.68 수준이다. 매우 진보적 성향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는 1.3,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1.64로 남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48,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1.43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1.4,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1.48로 남성이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67~0.80의 범위를 보인다.

<표 8> 성별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 해결 정도 독도문제의 해결 수준 인식

		매우 보수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진보	전체
여성	AVG	1.42	1.46	1.45	1.26	1.3	1.40
	SD	.786	.873	.658	.590	.483	.670
	Freq	7	56	282	134	10	489
남성	AVG	2.125	1.535	1.50	1.28	1.63	1.47
	SD	1.087	.848	.759	.679	1.43	.801
	Freq	16	99	25	126	11	511
전체	AVG	1.913	1.50	1.478	1.27	1.47	1.441
	SD	1.040	.855	.708	.633	1.07	.740
	Freq	23	155	541	260	21	1000

주: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다음으로 성별 및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4.48이었으며, 남성은 약 4.26으로 여성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여성의 평균 점수는 4.4, 남성의 평균 점수는 4.44로 거의 비슷하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72,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0.79이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4.55,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4.46으로 여성이 높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750.86의 범위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4.77,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4.49로 여성이 높으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43, 남성의 표준편차는 약 0.78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는 약 4.54, 남성의 평균 점수는 약 4.43으로 여성이 조금 더 높으며, 전체적으로 표준편차는 약 0.740의 수준이다.

<표 9> 성별 및 교육 수준에 따른 독도문제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

		고졸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전체
여성	AVG	4.48	4.4	4.54	4.76	4.54
	SD	.805	.723	.746	.426	.740
	Freq	102	30	318	39	489
남성	AVG	4.26	4.44	4.45	4.48	4.42
	SD	1.07	.786	.861	.776	.888
	Freq	89	50	325	47	511
전체	AVG	4.38	4.42	4.50	4.616	4.48
	SD	.943	.759	.807	.653	.821
	Freq	191	80	643	86	1000

주: 한일갈등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른 독도문제의 해결 수준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고졸 이하 여성의 평균은 1.5, 남성의 평균은 1.55이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8로 나타났다. 대학에 재학중인 여성의 평균은 약 1.77, 남성의 평균은 1.52이며, 여성의 표준편차는 약 0.9, 남성은 약 0.81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남성의 평균은 각각 약 1.34와 1.45로 나타났다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7~0.8 수준이다. 대학원 이상의 여성과 남성의 평균은 각각 약 1.33과 1.49이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5~0.9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평균은 약 1.4, 남성의 평균은 약 1.48 나타났으며, 두 성별 모두 표준편차는 약 0.67~0.8이었다. 즉, 남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성별 및 교육 수준에 따른 문제 해결 정도 독도문제의 해결 수준 인식

		고졸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전체
여성	AVG	1.5	1.76	1.34	1.33	1.40
	SD	.7278	.897	.629	.529	.670
	Freq	102	30	318	39	489
남성	AVG	1.55	1.52	1.45	1.48	1.479
	SD	.839	.81	.774	.905	.801
	Freq	89	50	325	47	511
전체	AVG	1.52	1.61	1.39	1.41	1.441
	SD	.780	.849	.708	.758	.740
	Freq	191	80	643	86	1000

주: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다음으로, 직업별 독도문제가 한일갈등과 문제해결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독도문제가 한일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평균 값이 4.5 수준이며, 표준편차는 대체로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일 갈등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수준의 인식은 평균 값은 대체로 1.4~1.5 범위에 있고, 표준편차는 1 미만이었다. 이 역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한일갈등에 대한 응답은 평균 4.5 근처에 몰려 있으며, 문제해결 수준에 대한 응답도 평균 1.4~1.5 범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패턴은 사무 종사자, 가정주부, 전문가, 무직 및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에서는 한일갈등에 대한 평균 응답이 3.9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문제해결 수준은 평균 1.7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관리자 직업군에 대해서 한일갈등의 평균은 5.00, 문제해결 수준의 평균은 3.00으로 다른 직업군과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표본이 2명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직업군의 특성과 문화, 그리고 일상 업무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직업별 독도 문제가 한·일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수준 인식

직업	빈도(명)	한일갈등		문제해결 수준	
		Mean	Std. Dev.	Mean	Std. Dev.
사무 종사자	64	4.47	0.85	1.42	0.75
가정주부	127	4.47	0.85	1.43	0.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1	4.53	0.73	1.42	0.73
무직, 취업준비생	73	4.49	0.88	1.47	0.87
서비스 종사자	40	4.45	0.75	1.48	0.72
관리자	2	5.00	0.00	3.00	2.83
학생	33	4.52	0.80	1.55	0.97
판매 종사자	20	3.90	1.29	1.70	0.98
단순노무 종사자	36	4.64	0.68	1.33	0.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8	4.55	0.73	1.40	0.6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	4.55	0.73	1.41	0.6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82	4.21	1.10	1.55	0.77
전체	1,000	4.48	0.82	1.44	0.74

주: 한일갈등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문제해결 수준은 1~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3.3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인터뷰에서는 5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 대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 것이다.

#### 독도문제에 대한 인터뷰 주요 내용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사이버 독도 학교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 독도를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과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알려야 한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지만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의 인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혼자 힘의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할 때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줄다리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명백히 우리 땅이다.

독도문제에 관련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관련하여 영토분쟁과 외교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인식을 내외국인들에게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토는 국가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독도문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홍보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반응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민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며 독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외교보다는 공공외교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같은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독도의 위치와 “독도는 우리땅”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독도 서포터즈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점들 중 가장은 중요한 역사 왜곡이란 사실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온 지역이며,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울릉도에 종속된 섬이다.

독도에 대한 외국의 인식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독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타국의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외교를 통해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려야 한다.

일본은 일본의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류들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독도영토의 편입을 주장했고 일본정부는 한국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인 후 일방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초등 교육 과정부터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잘못된 정보를 교육하고 잘못된 정보로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행사를 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일본의 땅을 침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일본의 국내외 상황을 생각하면, 독도 영유권 도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이번에 독도문제에 관해 조사하면서 저도 나름 독도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느꼈다.

저도 독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서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수업을 계기로 우리가 몰랐지만 아직까지 우리 영토에 대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중에 꼭 독도를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독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독도문제는 몇십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 상태로 남아 있다.

외국인 유학생 평화 기고단은 독도 탐방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독도는 우리 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더욱 이해하고자 국에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효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그렇기에 공공 외교를 통한 체험들을 더 많이 지원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 또한 독도에 대한 지식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독도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독도에 큰 관심을 갖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SNS를 통해 마케팅을 해야한다. 나는 독도를 홍보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를 문화 강대국으로 만든 공신인 K-pop 가수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BTS를 독도와 연계하여 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해외에 독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보수나 보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독도 홍보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 부서의 규모 또한 증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 항의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국력이 강해져 항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라가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하여 불공평한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방법을 계획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교적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가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일본은 항시 독도의 소유권 주장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분들 앞에서도 뻔뻔함을 앞세운다. 일본에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을 하는 상황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욱 크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 외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외교는 '소프트 파워' 자원을 활용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일반 대중과 소통하여 자국의 정책이나 가치 등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평화 리포트단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독도'에 관한 역사를 배워 그들의 시각에서 알릴 수 있어 더욱 공공 외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유학생들이 자국에 기고문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독도에 대해 알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지지층을 양성할 수 있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독도에 대한 공공 외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현 시점에서 '세계 평화의 시작'을 위해서도 독도 공공 외교에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공 외교적 관점에서 독도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문한 것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독도의 중요성과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

회가 된다. 또한 국제적인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국가나 지역의 장애인들과의 문화 교류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어 독도 역사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하여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인 것을 알릴 수 있다.

국가법령에 따라 일본은 독도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한국이 독도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국가법령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장. 독도인식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

### 1. 공공외교 전략을 활용한 독도문제 개선방안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과 한일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신뢰의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더불어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수 있다. 독도 등 한일관계에 문제로 인식되는 주요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한일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 주요국에 대한 위협 인식 등과 교육 수준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이 한일관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상미, 2023). 최은미(2018)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민감한 갈등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갈등사안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화해의 환경을 조성하여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개선에 있어 과거사와 같은 문제의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호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내의 반일감정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는 단순히 과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화, 독도 영토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한국인의 대일감정을 부정적으로 조장하는 요인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이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서정욱, 김동욱, 2020).

따라서,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한 직접적, 간접적 접촉의 중요성을 요구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호감을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과 이해 및 공감의 향상 등의 태도로 이어진질 수 있다(조운용, 2016). 기존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를 통한 상호 이해는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다양한 감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종호 외, 2014).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 2. 개선방안 및 전략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의 제5조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11),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12) 등과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의 마련에서는 교육과 공공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 (1) 독도문제 관련 교육 방안

우리나라의 독도와 관련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sup>18)</sup>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아닌 권고사항 정도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한다. 첫째, 독도는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로서 문헌과 지리적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영토 연속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독도의 보호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호와 직결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 점령과 국가의 주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독도는 경제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으며, 주변 해역의 풍부한 어장과 유망한 해양자원,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독도는 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며,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영토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단순한 이론적 교육보다는 흥미롭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독도를 지키고, 일본으로부터의 불법 점령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독도에 대한 지식과 애착을 높이는 한편,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사와 대학생 대상의 연구 결과 독도 교육의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과정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이 소외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독도의 중요성과 국유화의 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초중고와 대학에서 독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독도학교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독도 수호대'와 같은 모임을 통해 대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커리큘럼과 전략에 공공외교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독도 발전을 위한 활동

또한, 독도를 적극적으로 유인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 정착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독도 생태 마을이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도 생태마을은 독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어업, 생태관광 및 연구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마을에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토지를 매립하고 관련 시설을 조성하여 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이재하, 2013).<sup>19)</sup>

## (3) 정부차원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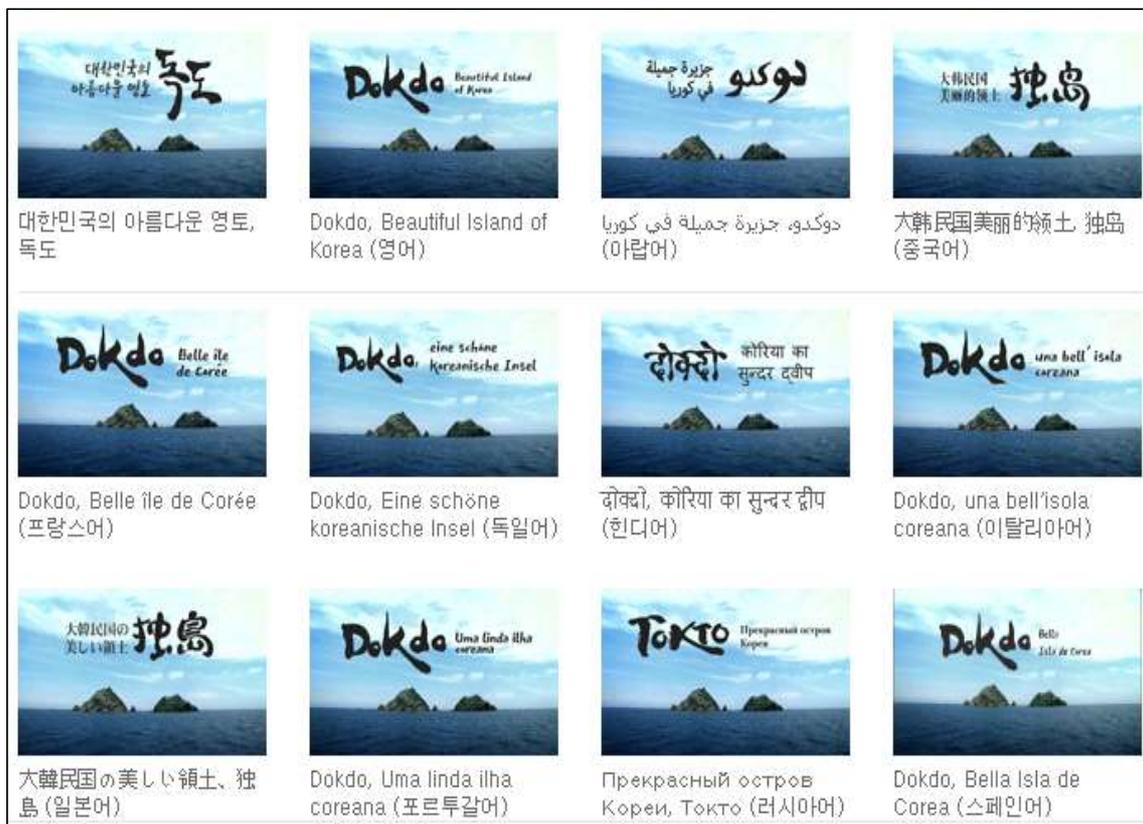
---

18) 오마이뉴스(2023.6.1.) “독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아는 학생은 거의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25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253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9) 이재하.(2013). 정부의 독도개발정책 문제점과 미래대안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49-53.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독도 이슈는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2023년 4월 11일에는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외교청서'는 외교부의 중요 외교사안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로, 일본은 이 문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한국의 독도 점거를 불법으로 명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며, 독도문제를 한·일 현안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20)</sup>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동영상은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주권 주장을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고 있다.<sup>21)</sup> 이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독도 홍보 영상



출처: 외교부([https://dokdo.mofa.go.kr/kor/pds/video\\_list.jsp](https://dokdo.mofa.go.kr/kor/pds/video_list.jsp))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독도 홍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으며, 특히 공공외교 측면에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공공외교는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국내외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국가의 정책과 가치, 비전 등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20) '강제징용 다음은 독도?'·일본, 독도 문제 한·일 현안으로 끌고가나, 경향신문. 2023.04.11

21) 외교부(<http://dokdo.mofa.go.kr>)

는 외교의 대상이 정부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포함되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공공외교 전략을 통해, 재외동포 학생들을 초청해 독도 관련 플래시몹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sup>22)</sup> 이 행사는 재외동포 학생들의 참여로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6·25전쟁, 88 서울올림픽 등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도 함께 제공해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외동포들이 이 행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주변에 전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 홍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제고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외교의 주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더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외교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공외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이 잘 협력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는 독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외교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 (4) 입법적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정해져 있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단기적인 관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대신에 독도 방문을 촉진하는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런 접근은 법정기념일 지정과 같은 대대적인 정책 변경보다 실질적인 독도 인식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른 행사 추진 등에는 매년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독도 교육은 이미 현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종합적 접근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홍보 및 문화 교류 강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독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 문화 교류 행사 등을 주최하여 독도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

22) 광화문광장서 재외동포 대학생 독도 플래시몹 / 연합뉴스 / 강성철 기자 / 2014.07.30. 05: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043247?sid=100>)

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며, 다국어 웹사이트, 책자,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외국인들에게도 독도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양국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한다. 독도 관련 토론, 시민 포럼, 청년 대화 모임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시민운동과 캠페인을 지원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효율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도 문제를 내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언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독도에 관한 기사, 동영상,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보도하고 공유하며,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내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독도 인식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안이 결국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5.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독도 문제에 관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독도 문제의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은 195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일관계의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도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독도 관련 활동의 추진과 참여, 홍보 및 캠페인, 제도적 노력 등을 경주하는 것과 동시에 독도 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 교육청의 사이버 독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독도 교육을 필수 과목에 포함시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에서는 비교과 활동, 강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2 정책적 함의 제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방향은 국내적 합의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태환, 202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식 확대를 통해 독도문제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평화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공공외교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인식은 양국에서 크게 다르다는 문제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상호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또한, 양국 시민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상대 국가의 정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김위근, 2020).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호감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공공외교정책의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과거 한국 정부의 역사외교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 김영삼정부 시기인데(이원덕, 2014), 20년 이상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교부(2022)가 제시한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도 제시된 것처럼, 한국이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공공외교가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한 전략과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제임스·강충구, 2019). 결국, 공공외교 연구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촉구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실질적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효과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이

론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중요하므로, 공공외교의 이론적 및 실천적 발전을 위해선 이론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조기숙·김화정, 2022). 따라서, 공공외교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한 실제 현상의 해석과 설명이 앞으로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도에 관한 지역주민과 국민 등 범국민적 차원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독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체계화하고, SNS 등에 독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독도와 더불어 울릉도는 인문·사회·경제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 음악, 미술 작품 등을 활발히 창작하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등 독도를 문화·예술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을 중심으로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독도와 관련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및 외교적 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있어, 정부차원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공공외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독도 문제에 관한 인식을 활성화하고 건설적인 한일관계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일 화합 시대에 독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국제적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독도 인식의 확산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독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역할 분담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독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독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독도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단체들에게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 6.3 후속연구의 필요성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조사와 관련해, 본 연구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 문제가 어떠한 관념과 접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도 문제에 관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룹을 구성하고,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 이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개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독도 문제의 현재 이슈에 관한 시각, 담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도 문제의 건설적 개선 방안의 도출에 관한 개인의 태도와 의견 등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도의 경우 국내 홍보보다는 해외에서의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고정민. (2016). <한류와 경영>. 서울: 푸른길.
- 기미야 다다시. (2018).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일본연구논총, 47, 141-170.
- 김명섭·안혜경. (2007).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299-327.
-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최현정. (2022).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김군수, 한영숙.(2015).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이슈&진단,(207),1-26.
- 김수진·이혜은. (2023). K-POP 팬덤과 한국의 국가 명성: 미국의 BTS 팬 중심 분석.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3(1), 1-19.
- 김위근. (2020).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6(4), 1-16.
- 김유경·김유신·박성현·이효복. (2012). 국가 정체성의 보편적 인식 차원과 영향에 관한 연구. 홍보학 연구, 16(2), 127-163.
- 김제임스·강충구. (2019). 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1-14.
- 김태완·조운용·이연옥·이혜진. (2016). 다문화수용성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1), 57-78.
- 김태환. (2021).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1-28.
- 나용우.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평화공공외교. 평화학연구, 23(4), 49-75.
- 남경태. (2022). 국가자부심과 소비자 적대감이 일본 불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6(3), 5-32.
- 박명희. (2022).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하와이주(洲)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66, 1-28.
- 박창건. (2017). 일본의 공공외교. 국가전략, 23(4), 91-114.
- 서정옥·김동욱. (2020).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 공동대응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1(4), 81-104.
- 손승혜. (2013). 한국 문화의 수용과 국가 이미지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파리 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자들의 문화수용 과정과 의미. 문화정책논총, 27(1), 101-120.
- 신경애. (2017). 한국 대학생의 한일관계와 대일외교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일본문화연구, 61, 77-98.
- 외교부. (2022).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6/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2716/contents.do))
- 이문영. (2023).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5(1), 289-319.
- 이숙중. (2017).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인식. 일본공간, 22, 95-131.

